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 BARUN ICT Event

### 바른ICT연구소,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APEC Virtual Forum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 환영사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 환영사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국제 간 확산을 위한 방안 협의’를 주제로 ‘2021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온라인 포럼’을 9월 8일(수)에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축사를 맡은 새년 코 APEC DPS(Data Privacy Subgroup, 미 상무부)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가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등 APEC 경제체 대표 8명이 각 국가별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현황과 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성에 관해 발표하고 제도 확산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제도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의 국제 간 이동 역시 중요해지고,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 개최되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시행을 위해 제도를 준비 중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유치한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적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원승연

## <Session 1>

### Singapore's Data Breach Notification

Chun How BAY



싱가포르는 데이터 유출 통지가 의무이다. 데이터 유출이 있을 경우 PDPC(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와 당사자인 개인에게 데이터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 유출 통지는 조직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유출 통지 사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유출의 원인으로는 멀웨어(malware)와 피싱(phishing), 보안 설정 문제, 코딩 문제, 담당자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성 부족, 취약한 계정 비밀번호 등의 유형이 있다. 데이터 유출 사실을 보고하기 전 사전 질문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과 유출 데이터의 크기 등을 입력하여 PDPC에 보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한다. 보고가 필요할 경우 데이터 유출 통지 양식을 작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 Australia's Notifiable Data Breaches scheme

David STEVENS



OAIC(Office of the Australia Information Commissioner)는 호주 정부와 산업에 걸쳐 프라이버시 및 정보 접근권을 증진, 유지하며 규제 감독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데이터 유출 통보 체계 프레임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기관들은 실제 데이터 유출 사례나 의심되는 데이터 유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와 OAIC에게 알려야 한다. 호주의 2021년 데이터 유출 보고는 지난 3월 이후로 감소 추세이며, 데이터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건강 서비스 제공자, 금융, 법률/회계 및 경영 서비스 순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어렵게 하는 요소는 인적 요인과 진화하는 기술적 위험, 다크웹 데이터의 성장, 그리고 규정 준수, 평가, 통지 체계 등이 있다. OAIC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규제 조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오주현

## <Session 2>

###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in Korea

Beomsoo KIM



한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 개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이다.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통지 등)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통지의 주요 구성요소는 1. 유출된 개인 데이터/정보 항목 목록 2. 개인정보가 침해된 시기와 방법 3.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4.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자의 즉각적인 조치 및 손상 복구 절차 5. 정보 주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 및 연락을 받는 부서 및 담당자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피해 이후, 정보 주체는 회원 탈퇴, 비밀번호 변경, 보안 설정 추가 등 개인적인 보안 강화 조치(54.1%)를 통해 피해 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 주체의 32.7%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 대중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Julio PERTUZE



Covid-19는 칠레의 디지털화를 가속했다. 칠레는 디지털화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현재 이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칠레 중소기업의 62%는 디지털 기술 사용이 증가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covid-19로 인해 칠레에 지속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배경은 2020년 칠레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의 첫 번째 대양횡단 케이블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칠레는 최근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현재 심의 중인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와 소비자 권리 법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보안과 관련하여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이 현재 심의 중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향후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김미예

### <Session 3>

## Handling Data Breach in Hong Kong

Brad KWOK



정보 유출은 정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의 보안 침해로 의심되어 데이터가 승인되지 않은 접근 또는 돌발적 접근, 처리, 삭제, 분실 또는 사용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데이터 보호 원칙 4 - 개인 데이터의 보안’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홍콩의 PCPD(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는 항상 정보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는 개인과 PCPD에게 데이터 침해 통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여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유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정보를 즉시 수집하고, 데이터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연락한 후, PCPD에 정보 유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Assessing Real Risk of Significant Harm from Privacy Breaches

Sonja HANISCH, Gillian KULAR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손상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한 손해의 실제 위험(RROSH, Real Risk of Significant Harm)의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의 민감도 및 개인정보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후 Gillian KULAR은 RROSH Tool의 작동 방식을 직접 시연했다. RROSH Tool은 질문 마법사와 유출 위험 평가 논리로 구성되었다.

## Promoting Comparability of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Reporting

Suguru IWAYA



OECD의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Digital Economy in 2016에 기초한 본 프로젝트는, 프라이버시 집행 기관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통보 의무 보고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고, 의무 보고의 도입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통보 보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 행렬에는 당국에 보고된 정보 유출 건수, 원인의 본질, 특정 원인, 유출된 정보의 유형 및 유출된 데이터의 암호화 정보가 포함된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원승연, 인턴 박정은

## ‘코로나19시대, 책임 있는 데이터 사용과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Asia Privacy Bridge Forum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연세대 정보대학원과 함께 ‘코로나19시대, 책임 있는 데이터 사용과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를 주제로 제10회 Asia Privacy Bridge Forum(의장 김범수, 이하 APB포럼)을 9월 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행사 첫째 날(9일), 스티브 우드(Steve Wood)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작업반 의장(Chair of the OECD Working Party on Data Governance and Privacy)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의 효율적 보호와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싱가포르와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9개국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들은 AI 로봇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이미지 정보의 보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둘째 날(10일)에는 김범수 의장과 발표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비공개 세션으로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이슈를 다룬 제10회 APB포럼의 발표 내용을 이번 호에 정리했다. 🌐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원승연

### The UK Experience of Data Prote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eve Wood (UK ICO & Chair of the WPDGP, UK)

ICO는 정보보호를 위해 8백여 명의 직원을 둔 독립기관으로, 영국의 정보권리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으로 2018년 정보보안법과 UK GDPR이 있다. ICO는 공공분야(중앙정부, 경찰), 민간(글로벌기업, 중소기업), 자선단체 등 영국 내 모든 기구와 기관들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정하고, 위반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정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와 집행 기능을 맡고 있다. UK GDPR은 EU GDPR을 영국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7가지 주요 원칙(합법/공정성/투명성, 목적 제한성, 최소한의 정보화, 정확성, 저장 제한, 청렴성/기밀유지성,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다.

ICO는 비례성과 투명성, 프라이버시와 같은 원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이 원칙을 선언하고 시행해왔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2021년 9월 기준으로 2천7백만 명이 영국 보건성 코로나 접촉자 추적 앱을 자발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기술 발전 지원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6대 최우선 과제(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성장과 디지털화 지원, 감시의 적절성, AI의 우수사례 지원, 투명성 지원, 비즈니스 연속성 및 코로나 이후 새로운 업무방법 개발)를 선정했다. 또한 록다운(폐쇄), 제한, 회복 등 코로나 단계별로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WPDGP와 GPA 의장국을 맡고 있는 ICO는, APB포럼과 같은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여해 우수사례, 접촉자 추적 및 코로나 인증제와 같은 각국의 대응방법을 공유하며, 글로벌 원칙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보호 방안의 자율적·의무적 시행, 사회적 불평등과 보건 차별, 감시 유지 여부, 정보 보관 기간 및 주체, 백신 접종 인증 앱의 생체인식 정보 및 디지털 ID 통합 등 여러 과제를 다룰 것이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오주현



## APB Session 1: Effective Data Protection and Security

### The Importance of 'Smooth' Data Usage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Age of AI, the IoT and Autonomous Robots

Fumio Shimpo (Keio University, Japan)



현재 우리는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며 이미 우리 생활에 자리하고 있다. AI와 로봇은 미래에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오픈 데이터 소스와 함께 AI가 사용되면서 정부의 정보 생산 능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AI 및 자율 로봇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AI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추천하면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AI와 자율로봇을 이용할 때 필요한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빅 브라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AI와 로봇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상행동, 판단 착오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사실 AI를 통한 딥러닝의 경우, 의사결정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개발자, 제조사에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는 치명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AI나 로봇을 법 집행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미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AI와 로봇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기존의 법률 범위와 해석을 바꾸지 않고는 AI 및 자율로봇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탑재한 로봇, 고급 정보처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법률 측면의 진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 Using Image Processing as Security Feature in Information Retrieval

Mohd Afizi bin Mohd Shukran (National Defence University of Malaysia, Malaysia)



정보 검색(IR, Information Retrieval)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는 기술로서 문서, 웹사이트, 온라인 카탈로그, 구조화된 기록, 멀티미디어와 같은 유형의 정보를 표현, 저장, 조직화 및 액세스하는 것을 말한다. IR의 초기 목표는 텍스트를 인덱싱하고 유용한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나아가 모델링, 웹 검색, 텍스트 분류, 시스템 아키텍처, UI, 데이터 시각화, 웹 필터링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CBIR, Content-based Image Retrieval)은 이미지 콘텐츠 관련 특징을 파악하고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정확하게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과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이런 알고리즘은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CBIR)과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IR은 이미지 정보의 정확한 검색을 위해 군집지능(SI, Swarm Intelligence)을 사용한다. 군집지능이란 개체의 무리가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물고기 떼, 새 떼가 구조적인 질서를 보이며 통일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미지 감지율을 높이기 위해 상관관계 기준 특징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실시간 감지 알고리즘을 개발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연결 구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인지 공격 패턴인지 구분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만들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문제 없이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고, 패킷 전송이나 네트워크 공격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ABC, Artificial Bee Colony)은 카라보가(Karaboga)의 아이디어로 다면적 모델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꿀벌 집단의 섭식 행동을 시뮬레이션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인공 벌 군집 알고리즘(ABC)은 주로 이미지 IR에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이미지 검색은 군집지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ABC 알고리즘 사용률이 높다. 정확하게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에서 영감을 얻은 알고리즘이 IR, 특히 CBIR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김미예

## APB Session 2: COVID-19 and Responsible Use of Data

### Contact Tracing Apps for Self-quarantine in South Korea: Rethinking Datafication and Dataveillance in the COVID-19 Age

Claire Seungeun Le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USA)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격리는 중요하다. 2020년 5월 15일 이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입국자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다운받아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자신의 체온 및 증상을 보고 하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앱으로는 자가진단 앱과 접촉자 추적 앱이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을 제외하고 48개국이 코로나 감염자를 위한 접촉자 추적 앱을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자가격리 접촉 추적 앱을 사용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데이터화는 앱에 저장된 자가진단 및 개인정보가 어떻게 데이터화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데이터

감시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한국에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이용하여 일 2회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정보는 앱에 저장된다. 이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감시되고 데이터화 될 수 있지만,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강 데이터 관련해서도 데이터 감시가 발생한다. 정해진 시간에 건강 상태를 기록하지 않으면 알림 문자가 온다. 즉, 데이터와 앱을 통해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GPS를 이용한 위치감시도 이루어진다. 정부 담당자와 같은 추적 담당자는 자가격리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앱에 입력된 정보는 저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앱 관련 데이터화와 데이터 감시는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우려될 만한 사항이다.

### Data Privacy in the Philippines & COVID-19 Response

Ivin Ronald D.M. Alzona (National Privacy Commission, Philippines)



필리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팬데믹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초기에는 확진자 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었다. 확진자 정보가 공개되면서 많은 확진자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에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코로나19 대응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낙인으로 오히려 팬데믹 대처가 어려워진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피하고자 증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의 접촉자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필리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팬데믹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관련 당국만 코로나19 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접촉자 추적 시 얻는 이점과 위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직원들이 일터로 출퇴근을 할 때 또는 재택근무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관한 컨설팅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의료분야, 사회분야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지침도 마련했다.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했다. 회사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가능한 대중들에게 쉽게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원승연, 인턴 유경주

## APB Session 3: Cross-border Data Governance

### Accountable and Trusted Transborder Data Flows by Building Convergence

Zee Kin Yeong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Singapore)



데이터는 소멸되는 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간 정보 공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디지털화로 정보의 양과 흐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국가들의 국가 간 정보 이동을 촉진하는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 21세기 초부터 개인정보를 비롯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1980년 OECD Privacy Guidelines에 기초한다. 즉,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아래 자국의 정보가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자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가능하다고 확신할 때만 정보의 이동을 허락해야 한다. 2019년 G20정상회담에서는 오사카 선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지지를 위한 국제 규정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국가 간 원활한 데이터의 이동을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가 간 개인정보 이동을 지지한다. 핵심내용은 전자적 수단으로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지지하며, 서버 현지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2020년 칠레, 뉴질랜드, 호주와 디지털경제협정(DEA)을 체결했다. 한국과는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영국과도 협상을 시작했다. 외에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인 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과 PRP(Privacy Recognition for Preprocessors System)에 참가하고 있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 중에 있다.

### Introduction of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s Global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ory Supporter Service

Jiyun Kim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orea)



개인정보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유형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세계 각국은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APEC은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U에서 한국으로 전달되는 개인정보의 적정성 판단을 지원한다. 한국 산업계의 EU GDPR의 준수를 지원하며 APEC과 협력하여 CBPR 인증 시스템을 도입 및 관리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 대응을 위해 주요 국가와 협력하며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입안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사이의 균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세계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며 해답을 찾아나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규정준수 지원서비스, 국제협력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국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상호운용성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일환으로 기업이 GDPR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분기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외에도 ePrivacy 클린 서비스를 통해 정보 주체가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데이터 관리 조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측정하고 민간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18 콜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대중, 다문화계층에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도 제공한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오주현**

## APB Session 4: Data Breach and Responsible Policies

### Promoting Comparability in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Reporting

Suguru Iwaya (Policy Analyst, OECD)



OECD에서 개인정보 유출통지 보고에 관한 비교 가능성 증진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정보 유출통지는 국가에 따라 통지의 의무화 여부가 다르지만, 현재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유출 통지가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통지가 의무화 되면서, OECD는 2016년 디지털경제 선언을 기반으로 정보 유출통지 보고를 통해 근거 중심의 보안 및 개인정보 정책 입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일반적인 기관 정보부터 규제 요건, 통계자료, 당국이 수집하는 자료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35개국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그중 32개국은 OECD 회원국이다.

OECD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간 데이터 비교 가능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사용하는 비교 가능한 정보 메트릭으로는 총 정보유출 통지 수, 원인, 상세 원인, 유출된 정보 유형, 유출된 정보의 암호화가 있다.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총 개인정보 유출통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원인 중 일부는 당국에서 정보 유출통지 보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관찰되는 추세는 대량 유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간 자료 비교가능성을 높이면 이러한 최신 추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 유출 원인으로 악성 공격, 시스템 결함, 인적 실수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는 개인 자격증명 정보, 건강정보, 재무정보 정보가 있었다. 또한 어떠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사용하고 있는 정보 지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OECD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Does a Data Breach Harm Industry Peers? Evidence From the U.S. Retail Industry

Jaeyoung Park (Yonsei University, Korea)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준다. 특히, 사이버 보안을 중요한 위험 요소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유출된 기업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스피로버 문헌과 정보 전송 효과 (information transfer effect)에 따르면, 어느 한 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동일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염 효과 또는 경쟁 효과로 나타난다. 전자는 그 위기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한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경쟁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경쟁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만약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경쟁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경쟁사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벤트 스터디 방법론을 활용하여 미국 리테일 산업(SIC 코드 52-59)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유출되지 않은 다른 리테일 기업의 시장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즉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스피로버 효과를 살펴보았다.

10건의 PoS(Point of Sales) 단말기 해킹 사고에 대하여 310개의 동종업계 기업 샘플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리스크 전염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느 한 리테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리테일 기업의 시장 가치가 동반 하락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유출 기업과 유사성이 높은 기업(SIC 코드가 4자리 동일한 기업)인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리테일 기업들이 사고 발생 직전 연례보고서에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어떻게 공시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연례보고서에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명확하게 공시한 경우에 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더욱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부정적인 스피로버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지며,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공시 전략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김미에



## APB Forum 2일차 - 전문가 토론회

포럼의 둘째 날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에 초점을 맞춘 초청 연사와 함께 개인정보 전문가 간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김범수 APB 의장(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장, 정보대학원장, OECD 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작업반 부의장)을 비롯해 Gillian Kular(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 사무국장)과 Junichi Ishii(일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태인(한국인터넷진흥원), Jing Huey Khor(말레이시아 사우스햄튼 대학), 이승은(매사추세츠 로웰 대학), Mohd Afizi bin Mohd Shukran(말레이시아 국방 대학)과 Joan Therese Medalla(필리핀 개인정보위원회 집행부) 등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토론에 참석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와 대응에 대해 논의하며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협력이 모색되었다.



이날 회의는 김범수 의장이 제10회 APB 포럼의 Open Session과 APEC Virtual 포럼의 요약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11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포럼을 지원하고 후원했으며, 이는 얼마나 많은 국가와 개인정보 보호 집행 당국이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APB, APEC 포럼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AI를 통한 윤리적 정보 사용, 정보의 규제 샌드박스, 정보의 휴대성, 정보의 주권, 잘못된 정보 및 개인정보, 전염병 시대의 정보 사용 및 오용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 **Joan Medalla(필리핀 개인정보위원회 집행부):** 각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자국민 혹은 개인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지만, 최근 개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고, 때로는 소핑을 하며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유, 저장, 및 삭제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개인들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 시민, 개인 및 국가를 정보 이슈로부터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김범수 APB 의장:**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동일한 메커니즘에 순응하기 위하여 다른 기술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특히 흥미롭고 시행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집행 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부, 글로벌 기업에 더불어 국내 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의 대표자와 사무실을 한국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승은(매사추세츠 로웰 대학):** 온라인 이슈 중 일부는 각 관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의 문제 또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정태인(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운 중국의 법안에 대응하는 방법과 기대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한국 기관과 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 **김범수 APB 의장:** 바른ICT연구소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에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툴킷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의 수준이 다르고, 각각의 문화, 규정, 관점에 따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툴킷의 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각 사건을 나타내며, 원의 색상은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을 나타낸다. 원을 클릭하면 원래 정보의 출처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빠르고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바른ICT연구소가 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결정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즉시 이 툴킷에 추가될 것이다. 오늘날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서도 매우 손쉽게 공유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대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와 개인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원승연, 인턴 박정은

## 제10회 Asia Privacy Bridge 포럼의 의미와 비전 김범수 의장과의 10문 10답



### Q1.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APB 포럼)은 무엇인가요?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이하 APB 포럼)은 국가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의 차이로 인한 비효율과 피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보완하며, 국민의 국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 만들어진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 Q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가 무엇인가요? 또 국가 간 법제도의 차이가 왜 문제인가요?

빅데이터, AI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고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분야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의 개인정보도 누군가에게 제공되고 있죠. 특히 온라인 서비스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을 더욱 촉진했구요. 즉 나의 몸은 한국에 있더라도, 나에 대한 정보는 지구상 어딘가 다른 나라에 나도 모르게 저장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제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나 빈도는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도는 국가 단위로 단절되어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로 넘어간 개인정보를 정부의 힘으로 지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나라마다 다른데, 다른 나라로 넘어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도, 각기 다른 개인정보보호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할 경우 나라마다 다른 규제와 법 제도의 수준에 맞춰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라마다 다른 서비스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경영상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Q3. 나라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도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약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수준이 나라마다 비슷해진다면, 국제적으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개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의 수준도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죠. 물론 나라의 환경과 문화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각 나라마다 규제나 법 제도가 다르다면, 기업의 서비스도 각 나라에 맞춰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네트워크의 협력과 공조



**Q4. 그렇다면, 한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에 관해 국제 간 협력과 공조가 왜 필요한가요?**

개인적 차원과 기업의 차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같은 수준의 법 제도를 외국에서도 채택한다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는 한국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요.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다면 그만큼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겠지요.

각 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와 법 제도에 관해서 정책적인 공통분모가 우리가 도입한 방식으로 넓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효율을 추구하는 데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5. 정보보호 정책에 관해 국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APB 포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각 국가의 규제나 법 제도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각 나라는 무엇보다 환경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각기 다른 규제나 법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꼭 개인정보보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간 협의만으로 이렇게 문화적 차이나, 각기 다른 환경에서 발생한 제도적 차이를 좁혀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 제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고쳐 나가려고 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국제 교류에 있어 학계나 기업,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민간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민간 교류를 통해 환경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론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APB 포럼은 학계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인사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서로 규제와 법 제도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민간 교류를 하더라도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학계와 같은 민간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협력이 더해질 때 국제 협력 네트워크는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연세대학교는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서 내외부의 지원을 다년간 지속해서 해왔고, 관련 업무 추진에 큰 받침돌이 되었습니다.



## APB포럼, 시작과 지난 6년

### Q6. APB 포럼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PB 포럼의 창설은 2015년 미국과 유럽 중심의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EU를 중심으로 운영된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려는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아시아인들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 연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룬ICT연구소가 정부 기관과 힘을 합쳐 아시아권에서의 민관협력 전문가 네트워크를 조직했고, 지금까지 6년 동안 함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 해에 두 번씩 국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있어 벌써 10회째를 맞았네요.

### Q7. 어떤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APB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학계, 정부 전문가들이 6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 하고 있죠. 특히 싱가포르는 APB 포럼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 국가일 뿐 아니라, 아세안(ASEAN)을 대표하는 정책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홍콩은 일찌감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영국의 법 제도를 받아들여 앞서 나갔었고요. 비교적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확립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 또한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Q8. APB포럼이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와 차이점을 많이 느끼시나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부터, APB 포럼은 국가 간 이동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이겨내야 한다는 물리적인 제약도 극복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더욱더 아쉬운 점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더욱 활발한 의견 공유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국제 교류의 특성상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과 비공식 석상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명확히 다릅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험과 시행착오는 문서상의 법 제도가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경북궁과 인사동을 거닐면서 차도 한잔하고, K-pop과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 제도의 시행이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속 깊은 얘기들, 생생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이 앞서 말씀드린 문화적, 환경적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는 향후 개최될 11회 APB 포럼이 오프라인으로 다시 개최되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APB 포럼의 향후 비전, 시민참여 보장하는 국제적 공론장으로

### Q9. 앞으로 APB 포럼이 나아갈 방향, 비전이 뭔가요?

앞으로도 APB 포럼은 ‘효과적인 글로벌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규제와 제도’는 소수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의 교류와 소통,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AI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각각의 정책이 효과적인지, 새로운 방법의 규제는 없는지, 강화하여야 하는지, 완화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별 그리고 국제적 법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Q10.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한 국가의 힘으로만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우리 모두가 지속해서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또 제공받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혹시라도 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각자가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APB 포럼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APB 포럼은 더욱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장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전 세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원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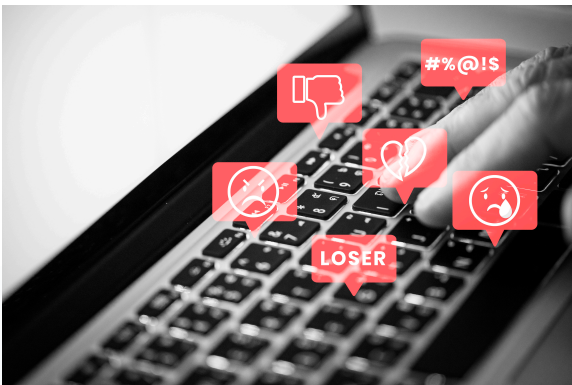
## 댓글 서비스 폐지, 과연 최선일까?

이지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지난 2019년 겨울부터 대형 포털사이트 3사인 다음,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는 순차적으로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2019년 연이어 발생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였다. 2020년에는 프로배구선수의 죽음으로 다음과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마저 폐지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들의 죽음에는 공통적으로 꼽히는 배경이 있었다. 바로 이들이 ‘악성 댓글’의 공격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악성 댓글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이 작성한 글이나 콘텐츠에 다는 악의적인 댓글을 의미한다[1]. 컴퓨터 및 휴대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이용의 빈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온라인의 빠른 성장으로 사람들은 많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발전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악성 댓글’이다. 악성 댓글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로, 지난 20여년 간 악성 댓글의 발생 빈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두 배 증가한 16,633건이 적발됐다[2].

댓글 서비스 폐지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할 때마다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순간에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댓글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었다. 피해자는 잊히고 악플러들은 또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섰다. 2020년 말 이루어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연예 및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에 대한 이용자의 생각을 물었다. 77.6%와 71.0%의 응답자는 각각 연예와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예 및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의 전면적 폐지만이 최선의 방안이었는지는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댓글 서비스 폐지에 대해 양면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댓글 서비스 폐지 자체가 댓글 문화의 긍정적인 기능을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댓글이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피드백 요소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한다[4]. 혹은 댓글 폐지 서비스는 관찮은 선택이었으나 악플러들을 다른 창구로 이동하게 만들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른바 ‘풍선 효과’때문이다. 포털 게시판에서 유튜브, 개인 SNS 등으로 그 활동무대를 옮긴 악플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5]. 어쩌면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직접 악성 댓글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잔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예 및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논의가 댓글 서비스 폐지로만 끝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가 연예 및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유명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소통 창구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악성 댓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댓글 서비스 폐지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할 때마다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순간에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댓글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었다. 피해자는 잊히고 악플러들은 또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섰다. 2020년 말 이루어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연예 및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에 대한 이용자의 생각을 물었다. 77.6%와 71.0%의 응답자는 각각 연예와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3].

[1] 나은영. (2015). 인터넷상의 야누스, 악플의 사회심리학.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15, pp. 16.


[2] 경찰청, 2021.9.13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4.jsp>

[3] 최승영. (2020.12.17). 네이버 '많이 본 뉴스' 개편 잘했다 62%. 한국기자협회. Retrieved from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8612](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8612)

[4] 이정현. (2020.7.7). 포털 3사 연예 댓글 폐지, 연예계 득과 실은.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056700005>

[5] 임해원. (2020.11.20). 포털 '댓글 폐지'에도 악플 성행 왜?. 뉴스로드. Retrieved from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2>

# Digital Skills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oderation Role of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Piao Wenling 

Global Student Reporter and Researcher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박사과정



2020년은 정보격차의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에 일부 연구원들은 인터넷 접근의 잠재적 불평등을 주장했다. 한 세대 후 인터넷의 확산과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인터넷 접근의 불평등은 장비, 사용의 자율성, 기술, 사회적 지원 및 기술 사용의 목적과 같은 포괄적인 디지털 격차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는 시민 사회의 분열과 양극화 현상의 측면에서 정보격차 문제에 접근하여, 디지털 기술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팀의 연구는 제2의 디지털 격차(디지털 기술)와 제3의 디지털 격차(정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3차원의 디지털 기술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웹 페이지 즐겨찾기와 같은 인터넷 기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을 위한 질문 답변과 같은 지식 생산 기술,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정보의 평가 및 분석 기술로 구별했다. 우리는 응답자들이 뉴스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지, 정기적으로 뉴스를 리트윗하는지 등과 같이 정치 참여의 범위를 온라인 정치 참여로 제한했다.

해당 연구는 두 가지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 정치 참여의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의 정교화(정치 참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디지털 기술 지수는 무엇인가?) 2. 개인의 디지털 기술 수준과 정치적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매커니즘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팀은 정치적 이슈와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의 동기와 능력에서의 성별, 나이, 교육 및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소의 조절 효과를 중시했다. 연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은 정치 참여와 정적인 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지식 생산 기술 또한 정치 참여와 정적 상관 관계를 이루었다. 반면에, 정보의 평가 및 분석 기술은 정치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 나아가, 연령과 정보의 평가 및 분석 기술의 관계에서는 노인의 정보 분석 기술이 증가할수록 그들이 정치 참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분석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 참여에 덜 관여할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인터넷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분석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적 참여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더 높은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상관 관계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함리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결과에 이미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온라인 참여에 더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면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해서 온라인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 표본의 90%에 달하는 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치 참여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

\*이 글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우수상 수상작을 요약한 것입니다.



# Comparative Analysis of Uberization, or Gig Economy, Workplace Issues and Solutions for Service Providers in Sou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hiwon Lee 

Global Student Reporter and Researcher  
MIT Integrated Design & Management (IDM) 석사과정

이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우버화, 각 경제에 관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단점을 강조하고 그에 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버화는 모바일 기술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서비스의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각 경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이 더 보편화된 노동 시장이다. 우버화는 사용자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지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정 측면에서 각 경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는 3개 나라의 주요 각 경제 플랫폼에 초점을 두어 한국의 Kmong, 중국의 Taobao, 미국의 Fiverr를 조사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누리는 장점으로는 현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직무 자율성이 높아졌으며, 장기적인 책무가 없으며, 여러 일자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높은 자율성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과로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플랫폼은 그들이 의존하는 업무 현장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서비스 제공업체일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보호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https://fabrikbrands.com/>

법적인 결점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빠져드는 근본적인 함정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된 세 플랫폼 모두 그들은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Fiverr의 계약서에는 플랫폼이 “저작권의 적절성 혹은 위반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과열된 경쟁은 낮은 시장 가격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Kmong에서는 자격 요건의 검증 과정이 없었고, 이로 인해 시장에 제공업체가 많이 유입되어 결국에는 낮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다. 또한, 유능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평가하는 등급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참을 수 없는 요청까지 견딜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해결책은 첫째, 법적 책임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를 교육하기, 둘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높은 장벽 설정, 셋째,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사회 보험 확대 등이 있다. 우버화와 각 경제 플랫폼의 세계적인 추세와 그의 영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각 경제 플랫폼들이 추가적으로 분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우수상 수상작을 요약한 것입니다.



## Fake News: Challenging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Written by **Jeongeun PAR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Centuries before the advent of social media, in his *Politics*, Aristotle addressed the fundamental quality of democracy that distinguishes us from other animals and makes us, in his famous words, a "political animal" [1]. According to Aristotle, our democracy is the capacity of speech, or, in Greek, "logos," which includes not only speech but also reason. It is our ability to communicate rationally that permits elections to take place and our representative political institutions to operate. Freedom of speech allows citizens to pursue their interests and change the institutions whose choices affect their lives. Nonetheless, we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democracy and the regulation of fake news. Democracy will only move beyond fake news to ideal democracy when individuals are able to produce and select the true quality of information. Concerned with the fake news issue threatening our democracy, I read three articles to figure out solutions: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fake news on democracy, in the article "The Term 'Fake News' Is Doing Great Harm" posted on *The Conversation* on July 27, 2018, Joshua Habgood-Coote, the Vice-Chancellor's Fellow at the University of Bristol, claims that we should stop using the term "fake new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In extension of Habgood-Coote's solution, in the article "How to Reduce the Spread of Fake News – By Doing Nothing" published in *The Conversation* on December 19, 2020, Tom Buchanan, Professor of Psychology at University of Westminster, argues that people should try to avoid spreading fake news and reduce their visibility in order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caused by th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n "Opinion: To Control Online Misinformation, We Need Real-World Solutions" published in *Poynter* on February 4, 2021, Angie Drobnic Holan, the editor-in-chief of *PolitiFact*, calls for the need of fundamental solutions that come from every sector of society to combat violence and intimidation brought about by the results of fake news.

Although Habgood-Coote, Buchanan, and Holan all agree that fake news has been threatening democratic values, they differ in terms of how to tackl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fake news. While I fully concur with all three authors that fake news has been undermining the intellectual values of democracy, I disagree with the passive solutions suggested by Habgood-Coote and Buchanan. Since the most serious problem associated with fake news is that most people are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truth and false information, I believe that earlier media literacy education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ensure that every member of society is able to participate to seek solutions to deal with the fake news issue.

To begin with, Habgood-Coote, Buchanan, and Holan all concur that fake news has been undermining the values of democracy. According to Habgood-Coote, the distorted meaning of the term "fake news" is abused by politicians, and the confusion it has caused undermines intellectual principles of democracy. Likewise, Buchanan insists that



# BARUN ICT Essay Contest

the spread of online fake news has been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the very fabric of our democracy” [2] since it weakens people’s ability to judge the credibility and truthfulness of information. Similarly, Holan claims that “if we want to live in a democracy where we’re capable of reasoned debate and decision making, every American needs to think about solutions” [4]. By stating this, Holan indicates that American democracy has been and will be threatened unless we solve the fake news issues.



Despite their agreement on the negative effects of fake news on democratic values, Habgood-Coote, Buchanan, and Holan suggest different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information crisis and defend our democracy. Habgood-Coote suggests that we should stop using the term “fake news” because it legitimizes its propagandistic uses by deceitful politicians by making them appear to be rational contributions to democratic discourse [3]. In the meantime, Buchanan argues that the best way we can reduce the spread of fake news and its impact is to do nothing at all [2]. He insists that decreasing the visibility of fake news and ignoring its existence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reduction of fake news because there would be no longer use of it. Holan, on the other hand, asserts that the problem

of misinformation requires technology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detailed regulations and tangible penalties on fake news [4].

I strongly concur with all three authors that fake news harms modern democracy. According to Buchanan, fake news can “exploit and exacerbate divisions in society,” and leads to “social unrest and inciting violence” [2]. As Buchanan mentions, the most serious problem associated with fake news is that misinformation can shake democracy from its roots. The occurrence of fake news due to poor media credibility should be treated very seriously, considering that the media is the immune system of democracy. In a society where fake news is rampant, citizens are not guaranteed free and equitable access to information that allows them to consider all aspects of the phenomenon without prejudice based on fair and balanced information. A democratic society must be well equipped with a mechanism for continuing to provide fair and informative truthful information to its citizens. The uninformed or misinformed public is the source of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usion, conflict, and division in society, and the public reaffirming and reinforcing their prejudices through fake news is likely to be the source of bigger problems than the uninformed public itself.

I believe that the greatest challenge fake news poses is that people lack the ability to distinguish whether the information they encounter online is true or not, and this can be solved by earlier media literacy education. Recently, access to information has been increasing exponentially; but conversely, the accuracy and balance of information are decreasing rapidly. A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expand their scope and functions, a



designed by freepik

variety of problems arise, including loss of management of individual data, increased monitorability in autocratic systems, and the emergence of new methods for harmful propaganda. Problems such as inaccuracies of online information are attributed to less filtering and monitoring than before. However, filtering and monitoring are methods by autocratic states and are not suitable for the basic ideology of a democratic society, so we must find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while allowing more access to information. What is considered the most democratic approach is educating people to have the power to evaluate, analyze, and choose whether to take action on certain information, and enabling members of society to become smarter consumers and producers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fake news online, particularly on social media, has sparked widespread concern, owing in large part to its serious harm on public opinion, and ultimately, democratic discourse. Considering the recent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fake news, which has steadily become a powerful and evil force in both the news media environment and democratic elections. The status quo raises concerns about how the general public interacts with such sources, as well as the extent and manner in which individual accountability should regulate interactions with fake news. We should be able to distinguish truth from falsity; otherwise, it is more dangerous than ignorance.



- [1] Aristotle. Aristotle's Politics. Oxford:Clarendon Press, 1905.
- [2] Buchanan, Tom. "How to Reduce the Spread of Fake News – By Doing Nothing." The Conversation, 19 December 2020.
- [3] Habgood-Coote, Joshua. "The Term 'Fake News' Is Doing Great Harm." The Conversation, 27 July 2018.
- [4] Holan, Angie Drobnic. "Opinion: To Control Online Misinformation, We Need Real-World Solutions." Poynter, 4 February 2021.

#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채용공고

## 채용분야

- 공학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AI), 머신러닝(딥러닝) 등 관련 분야
- 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 수행업무

바른ICT연구소 연구방향과 관련된 연구수행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 교류 및 공동 연구

## 지원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목록 이메일로 제출 (barunict@barunict.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arunict.kr](http://www.barunict.kr), 02-2123-6694 참조

**즐거로운 디지털생활  
스마트폰바르게사용하기 캠페인**

**건강하게 사용하기**

- 잠잘 때는 거리두기!
- 과도한 사용은 No, No!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규칙 세우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 소음에 주의, 주머니에 넣고 걷기
- 게임, 동영상 이용 연령 확인 필수!

**똑똑하게 사용하기**

- TED, MOOC 유명강좌도 무료!
- 손 안에 세상, AI비서로 편리하게!
- 손 안의 세상, AI비서로 편리하게!

**즐겁게 사용하기**

- 방콕 아닌 집콕, 홈트로 해스~
- 온택트, 영상통화로 소통의 즐거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스마트ICT 융합지원센터

**스마트폰바르게사용하기  
캠페인 실천수칙**

지능정보화시대, 하루 온종일 함께하는 스마트폰~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천 약속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건강하게 사용하기**

- 잠잘 때는 거리두기!
- 과도한 사용은 No, No!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규칙 세우기!
- 불필요한 대화방 알림은 OFF!
- 앱 다이어트로 안 쓰는 앱 정리!

**안전하게 사용하기**

- 소음에 주의, 주머니에 넣고 걷기
- 게임, 동영상 이용 연령 확인 필수!
- 사고예방, 이어폰 볼륨 줄여요~!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저장장기!
- SNS 친구추가는 필요한 친구만!

**똑똑하게 사용하기**

- TED, MOOC 유명강좌도 무료!
- 손 안에 세상, AI비서로 편리하게!
- 혼들고, 체크인! QR코드 센스~
- 정부24 등 유용한 전자정부 앱 활용!
- 공공장소에서는 매너모드로~

**즐겁게 사용하기**

- 방콕 아닌 집콕, 홈트로 해스~
- 온택트, 영상통화로 소통의 즐거움!
- 이젠, 폰으로 작품을 만들어 볼까?
- 전자책 활용, 어디서든 독서삼매경
- 대화에 집중, 스마트폰 뒤집어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되는 외부 기고글은 (컬럼, 글로벌 뉴스 등) 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mailto: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원승연  
Editor 나효정, 이지은, 전희영, 조하늘 | Designer 정아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http://www.barunict.kr)(국문), [www.barunict.org](http://www.barunict.org) (English)

